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무총리는 2년마다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ㄴ. 기본지침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 ㄷ. 국무총리가 작성한 기본지침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모든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에게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지만, 확인.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거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한 물자가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군수는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ㄴ.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ㄷ.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ㄹ.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의 양성
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 포함)을 하게 할 수 있다.
- ㄴ.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를 지정하는 경우 물자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
- ㄷ.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는 2년마다 소관 중점관리대상자
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
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의 실시명령은 대통령이 발
령한다.
-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 ④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의 확인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확인·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고유식별정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비훈련과 다른 훈련 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훈련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비상대비훈련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②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 비상대비훈련 -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동시관리훈련 -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 ④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비상대비훈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된다.
- ②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재난구호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④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회사무총장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ㄷ. 국가보훈처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데,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ㄹ.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데,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 乙, 丙,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 25세의 여성인 甲은 대학의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 27세의 남성인 乙은 A시에 거주하며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7년째 재학 중인 학생이다.
- 33세의 남성인 丙은 A시 소재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 48세의 남성인 丁은 대기업을 명예퇴직하고 A시에 거주하며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 ① 甲은 지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으나,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해당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권으로 甲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乙은 산업대학에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 지나면 A시의 지역 민방위대에 편성되어야 하지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
- ③ 丙이 퇴직함으로써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19명이 된 경우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A시 소재의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A시 인근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 ④ 丁은 지원하여 A시의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었으나, 이후 A시에서 B시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ㄴ.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6개월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ㄷ. 6개월 간 국외파견 중인 검사의 교육훈련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 ㄹ. 민방위 대원 甲의 교육훈련일에 본인의 결혼식이 예정된 경우, 소집일 3일 전에 甲의 모친이 甲을 대신하여 甲의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甲은 훈련을 유예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도 B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C동의 동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여 2018. 3. 11. 동원을 명하였고, C동에 주소를 둔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18. 3. 14. 부상을 당한 후 장애등급 제2급으로 판정되어 800일 동안 치료에 전념하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200만원이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300만원이며,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10만 원이다.

- ① 甲의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대해 B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나 A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甲이 치료신청서를 B시장에게 제출하여 B시에 소재한 의료시설을 지정받은 경우 치료 비용은 B시가 부담하고, 이 경우 국가는 B시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甲은 휴업 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甲은 부상으로 인한 재해 보상금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사망 보상금으로 1억 800만원을 지급받는다.

문 17. 야간에 적기(敵機)의 공습이 시작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응급조치를 명하려고 한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화관제는 항공기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더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방송·사이렌·타종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경보하여야 한다.
- ③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의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기의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의 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거짓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 甲은 동원명령 발령지역인 A섬에 있는 예비군대원 乙에게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지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乙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② 甲이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을 위해 전화의 방법으로 乙에게 소집통지를 한 경우, 소집통지를 받은 乙은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乙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경우, 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2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된 甲
- 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배임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난 乙
- ㄷ. 「형법」상 공연음란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丙
- ㄹ.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丁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21. 예비군법령상 비상근 예비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역인 병은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할 수 없다.
- ② 국방부장관이 500명 정원의 단기 비상근예비군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③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이 비상근예비군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 경우, 입영부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문 22. A시에 거주하는 甲은 지역예비군의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다. 甲은 3층에서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甲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 甲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직접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ㄴ. 甲이 A시의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A시가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A시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ㄷ. 만약, 甲이 위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서 보상 대상자가 된다.

	<u>ㄱ</u>	<u>ㄴ</u>	<u>ㄷ</u>
①	O	O	X
②	O	X	O
③	X	O	X
④	X	X	X

문 23.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 ②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그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그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 24. 예비군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 소개(疏開) 명령을 하였으나,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X대학교의 총장 乙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학생이 동원된 기간동안 출석을 하지 못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였다.
- 예비군 훈련을 위해 소집된 丙은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였다.
- 전시(戰時)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丁을 검문하자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 ① 甲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소관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차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④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시에 발생한 ㉠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甲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 ①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A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甲이 인정하는 재난은 ㉠에 해당한다.
- ② ㉠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외국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재난인 경우에는 甲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 ③ 甲의 요청에 의해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 ④ 甲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 및 A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신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의 발생을 발견하였음에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재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재난인 경우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조정·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관계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 ㄷ.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ㄹ.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재난유형별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문 31. A도의 도지사 甲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은 관할 B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이 B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A도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결과를 보고받은 국무총리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甲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B 지역에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B 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아 보수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B 지역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2. 다음 사례에서 ㉠ ~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X광역시의 시장은 X광역시 Y동의 화재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화재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한 후 지체 없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한편, 위의 화재가 발생하자 X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었고,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 X광역시 소방본부장 甲은 즉시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긴급수송 및 구호품의 확보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 甲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제한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 甲은 신속기동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휘요원, 안전담당요원,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으로 구성된 권역현장지휘대를 구축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 및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자연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할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운영하게 하려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재난상황이 끝난 후 실시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긴급구조교육을,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긴급구조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의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하여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②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③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한다.
- ④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가 현장지휘소에 파견해야 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법령 I - 헌법

문 1.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8년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 ④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선출에 관하여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하였고,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및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문 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적이탈의 자유’의 개념에는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분리하여 따로 살펴볼 실익은 없다.
- ② 천부인권 사상은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낳았고 이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므로, 개인은 자신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적선택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 ③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 ④ 국적회복허가 등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문 3.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7조제1항이 “공무원은 … (중략) …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의 책임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이라고 해석되는 이상, 위 규정이 국민소환권이나 국민의 공무원 파면권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②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이 가능하며, 이러한 해석이 지방공무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무원의 신분상실 문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공무원 신분보장의 문제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이 불합리하게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의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아닌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문제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④ 공무원의 직무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직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엽관제를 지양하는 직업공무원제도 보장에 초점이 있는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문 4.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배상금 등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 중 별지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해당 조항 전단의 '부부 두 사람이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④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중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5.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그른 것(X)의 표시가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일정한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 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중 제232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철회된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ㄷ.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ㄹ. 2011년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된 이상 배심원 연령만을 그대로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만 20세 이상’에 관한 부분은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ㄱ	ㄴ	ㄷ	ㄹ
①	O	O	O	X
②	O	X	O	X
③	X	O	X	O
④	X	X	X	O

문 6.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 ②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군인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③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된다.
- ④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규정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문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된다.
- ②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수행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찰공무원인 경장의 1호봉 봉급월액을 군인인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것은 경장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④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8.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전기통신 및 대화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문 9.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 ㄴ. 헌법 제21조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ㄷ.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나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 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10.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국회법」 제48조제6항 본문 중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는 문언에서 개선될 수 없는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한다.
- ③ 헌법 제49조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 스스로 판단하여 법률에 정할 사항이다.
- ④ 헌법 제50조제1항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 11.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가운데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특수임무수행자인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 ②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구「국가배상법」 해당 조항의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문 12.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하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국회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문 13.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하면서 소비자의 해지권이 제한되는 계속거래의 유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② 대통령은 ‘정치적 헌법기관’ 혹은 ‘정치인’의 지위를 갖고 특정 정파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
- ③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비계엄을 선포한다.

문 1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과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 ② 감사원은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검사를 하며, 여기의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 15. 법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② 고등법원장이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③ 행정법원은 고등법원과 동급의 법원이며,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 ④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